

보안사업 육성 vs 취약점 노출 정보보호 공시 규제 ‘갑론을박’

‘정보보호 종합대책’ 기업 반응

공시의무 대상 666곳→2700곳
공시결과 토대 역량 ‘등급화’ 공개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로 ‘디지털 리스크’가 기업 가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현행 제도 조차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속에서 “보안 사업이 크게 육성될 기회”라는 반응과 “보안 취약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다.

2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지난 22일 정부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IT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 상반되게 나뉘고 있다.

현재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66곳 중 23.7%인 158곳의 정보보호 인력이 ‘0명’이었다. 26곳은 정보보호 책임자(CISO)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일부 기업은 CISO의 높은 연봉 대신 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까지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

개사에서 약 2700여 개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CEO의 보안 책임 원칙 명문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여기에서업계의갑론을박이이어지는 부분은 정보보호 공시제도다. 해당 제도는 기업의 보안 현황이 재무 상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시 대상 기업들은 정보보호 분야 투자액과 인력 현황,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관련 인증 및 점검 사항, 그 외 정보보호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시 의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에만 적용돼 있다. 회선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면서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동시에 정보통신 서비스 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는 기업 등이다.

국내 보안 업계는 이번 대책이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무 대상이 상장사 전체로 확대되면 당장 보안 인력 채용과 솔루션 도입, 컨설팅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간주하며 미뤄왔던 기업들도 공시와 등급화라는 압박 속에

서 지갑을 열게 될 것이란 기대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라며 “국내 보안 산업 전반의 규모가 커지고 관련 기술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공시 의무가 곧 상대적으로 보안 등급이 낮은 기업들을 향한 해커들의 집중포화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세부 공시 항목’이 취약점을 드러내는 창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순 투자총액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세부 사항 항목을 공개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취약점이 노출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의무화 한 ESG 공시 의무제도와 연결 짓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다. 2023년 ESG 공시 법제화가 예고된 후 의무 대상 기업들의 ESG 활동이 활발해졌던 전례를 볼 때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이후 관련 움직임은 필연적일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ESG 공시를 위한 ‘보여주기식’ 활동이 늘면서, 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친환경’으로 포장되는 ‘그린워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정보보호 공시 제도 역시 형식적인 실적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유플러스가 복잡한 디지털 생활 속에서 고객에게 ‘심플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통합 앱 ‘U+one’을 선보였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임직원이 U+one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고객센터·멤버십 앱 통합

대화형 AI기능 탑재 ‘U+one’ 선포

LG유플러스가 고객 통합 앱 ‘U+one(유플러스원)’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이 앱은 기존 고객센터와 멤버십 앱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화형 AI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U+one 출시는 LG유플러스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 ‘Simply. U+’의 일환이다.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고객이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앱에서는 통신 상품 가입, 요금 확인, 멤버십 혜택 등 고객 여정 전반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8개로 나뉘어 있던 메뉴를 ‘MY’, ‘스토어’, ‘혜택’ 3개로 단순화했으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 탭과 AI 검색 탭을 추가했다.

AI 검색 기능은 대규모언어모델(LL

M)을 기반으로, 고객이 질문하면 대화하듯 원하는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멤버십 기능 역시 출석체크, 영화 예매, 쿠폰 추천 등 인기 혜택을 메인 화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U+one은 베타 테스트 단계부터 고객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성을 개선했다. 이용자들은 요금·이용내역 확인과 혜택 탐색이 쉬워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앱 출시를 시작으로 ‘Simply. U+’ 철학을 전사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U+one을 통신을 넘어 일상·커머스·콘텐츠·구독 등으로 확장해 슈퍼앱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출시 기념으로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 ‘U+one과 함께 이루는 2025 버킷리스트’, ‘모두의 쿠폰’, ‘Simple.lab’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KT 후원 선수들, 전국체전 메달 38개 쾌거

역도의 박혜정, 근대5종 신수민 등
아마추어 종목 국가대표 선수 후원
‘스포츠 꿈나무 프로그램’ 3년째 운영

SK텔레콤은 자사가 후원하는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들이 지난 23일 막을 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를 따냈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22년부터 역도의 박혜정, 근대5종 신수민, 높이뛰기 최진우 선수 등 아마추어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해왔다. 또 육상·수영·근대5종·스포츠클라이밍 등 다양한 종목의 중·고교 선수를 지원하는 ‘SKT 스포츠 꿈나무’ 프로그램을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이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박혜정, 신수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역도 박혜정 선수가 바벨을 들어올리는 모습. /SKT

을 비롯해 수영 노민규·김준우, 육상 나마디 조엘진, 역도 박산해, 스쿼시 나주영 등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이 두 개 이상의 메달을 따내며 활약했다.

박혜정은 여자 일반부 87kg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23kg, 용상 155kg, 합계 278kg으로 3관왕을 달성했다. 신수민은

근대5종 여자 일반부 단체전과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랐다.

육상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은 남자 일반부 100m·200m·400m 계주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수영 노민규(경기고)는 5관왕, 김준우(광성고)는 4관왕에 올랐다.

역도 박산해(운양고)는 금메달 2개, 이다연(경남체고)은 금 1·은 2개를, 창던지기 이새봄(강원체고)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스쿼시 나주영, 펜싱 조주현, 사이클 박예빈, 태권도 권은주·남궁서연, 복싱 박태산 등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포츠 꿈나무’ 프로그램은 중·고교 유망주를 발굴해 초기 성장단계부터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30여 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국민의힘, 최민희 사퇴촉구·고발 예고

과방위원장 자녀 축의금 논란
국민의힘 송언석 “김영란법 위반 소지
뇌물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성립”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사진)이 전날(26일) 본회의장에서 자녀의 축의금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보도된 이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국감 종료 후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요즘 시중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보다도 최 위원장이 뜨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말한다. 자녀의 결혼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며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것인지,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중론이다. 사적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갑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사퇴하라. 그다음에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모 언론에서 보도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최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취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위원장의 문제는 피감기관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본인이 돈을 받았으면서 주기도 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묶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마음AI, 대화형 AI 에이전트 등 선보여

AI·사이버보안 콘퍼런스 운영사 참여

마음AI가 12월 3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제주 AI·사이버보안 콘퍼런스’의 운영사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도의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I 대중화에 따른 사이버안보 동향’, ‘AI 트렌드와 글로벌 사례’ 등을 주제로 인공지능·사이버보안 관련 강연이 열리고, 산업·교육·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논의된다.

마음AI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피지컬 AI 체험존’을 운영한다. 체험존에서는 대화형 AI 에이전트(SUDA 기반), 자율주행 로봇(WoRV 기반), AI 음성제어 및 안내 로봇, AI 방송·촬영 로봇 등 산업형 피지컬 AI 기술이 공개된다. 참가자들은 AI의 실시간 인식·판단·이동·상호작용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